

“사법 신뢰회복 책임자” vs “정치편향 문제”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이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 청문회...여야, 김선수 대법관 후보 이념 놓고 공방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는 드루킹 사건·정책 검증 쟁점

국회는 23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와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선 정치적 중립 여부와 변호사 시절 받았던 고액의 수입료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의 민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민 내정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선수 청문회=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위원장 해산심판 사건에서 통진당 측 변호인 단장으로 활동한 것을 고리로 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을 주장하는 한편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

덕성 문제를 놓고 공세를 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박근혜정부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망에 떨어진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책임자라며 맞섰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김 후보자는 소수의견, 다양성으로 포장된 이념 편향적, 정치적 인사”라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은 김 후보자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문제도 거론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2000년 11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양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실제 거래 가격을 절반 이상 깎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의 공세가 쏟아지자 민주당은 김 후

보자에 대한 엄호에 주력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성향에 대해선 보수나, 진보나로 문제 삼을 것이 아니며, 현행 법질서를 지키고 산다면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당적을 가진 적이 없는 김 후보자가 대법관 중립성 측면에서 책임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법원이 심각한 위기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계속 판사로 지내오신 분보다 법원 바깥에서 다양한 경험과 견해를 가진 분이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갑룡 청문회=민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야당은 ‘드루킹 부실수사’ 등으로 파상 공세를 펼친 반면, 여당은 정책 검증에 집중했다.

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경찰의 드루킹 수사를 보고 너무나 실망했다. 이런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인지, 진실을 가리기 위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도 “컨테

이너 참고에서 증거물이 엄청나게 나오고 드루킹 일당이 이것을 옮기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부실수사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드루킹 수사에 대한 엄호나 반박 없이 민 후보자의 정책 방향을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수사를 자제하는 것이 관행인데, 경찰이 드루킹 사건 피의사실을 언론에 지속적으로 흘려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 선거 기간 내내 계속 나왔다”고 지적한 것 이외에는 ‘드루킹 수사’를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여성을 책임자로 두는 여성 대상 범죄근절기구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며 “이것은 또다른 ‘펜스’를 이다. 남성이 수사해도 여성이 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문대통령 “靑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 신설”

수석·보좌관 회의...“기업·노동계 만나 사회적 대화”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정부가 앞장서겠다”며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만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며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졌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은 특수성이 있다”며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명에 가깝고,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에 달한다. 하지만 중증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하는 ‘자기고용 노동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

가임대료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의 종합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는 경쟁에서 밀리는 순간 실직자가 된다. 2014년 도입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는 2만명도 가입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근본적 재설계를 위한 정책 노력을 당부드린다. 많은 부분은 국회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감한 규제 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며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소득 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함께 병행해야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

‘기무사 문건’ 군·검 합동수사기구 구성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과 민간 검찰이 함께 ‘군·검 합동수사기구’ (가칭)를 구성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와 법무부는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시 계엄령’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해 공동으로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 결정은 기무사 문건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의 중대성과 민간인도 주요 수사대상자로

서 민간 검찰과의 공조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방부와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군 특별수사단장(전익수 공군대령)과 민간 검찰을 공동본부장으로 하는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측 공동본부장은 시민단체 고발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노만석 조사2부장이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전날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 수사를 위한 군·검 합동수사기구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美 의회, 자동차 고율관세 한국 제외 의견 공감”

여야 5당 원내대표 방미 결과 발표...“한미동맹 굳건”

지난주 ‘방미 의원외교’를 마치고 지난 22일 귀국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문제에 대한 한국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23일 갑작스럽게 숨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광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3박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전날 귀국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주 5당 원내대표들이 미국을 방문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고율)관세 부과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와 관련 미 의회와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한국 의회의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 관세와 관련, “이미 2016년

부터 관세가 완전 철폐됐고 한미FTA 재협상에 안전기준 인정 범위를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확대하고 픽업트럭 관세철폐기간을 2041년까지 20년간 연장하는 등 미측 요구사항이 반영됐다. 점, 그리고 232조 적용시 한미FTA 재협상 국회 비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설득했으며 그 결과 로스 상무장관, 게리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등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장 원내대표는 또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물론 여야 5당이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한다는 점, 그리고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북 제재가 완화돼서는 안 되며 주한미군의 주둔은 비핵화와 관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에 대해 미측은 의회와 정부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한미동맹은 지속될 것임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김광영 원내대표도 “통상문제와 비핵화 협정 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미국의 행정부나 의회 관계자들도 많은 공감을 표시했다”면서 “정기국회에서도 5개 정당이 협치를 이어나가서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민주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장에 김승남

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장으로 김승남 전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1~22일 이틀간 실시한 지역위원장 경선에서 김 전 의원이 2419표(62.47%)를 획득, 1453표(37.53%)를 얻은 신문식 전 의원을 966표(24.94%) 차로 꺾고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2년간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를 이끈다. 고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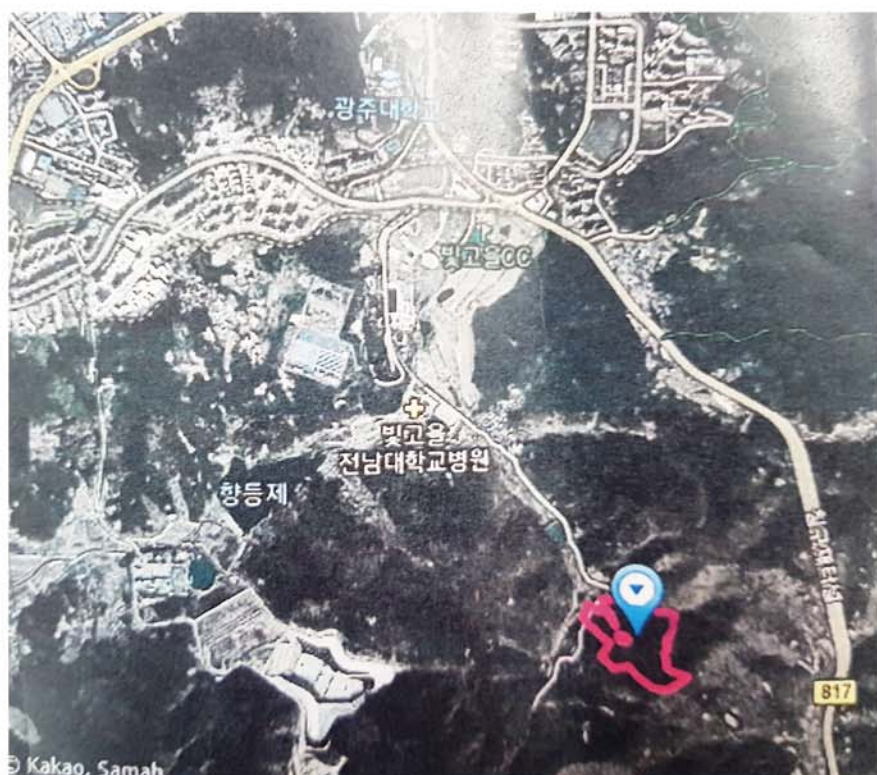


출신인 김위원장은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학생운동을 이끌었다. 1993년 꼬마 민주당 총재비서실장이던 문희상 국회의장관유로 정치에 입문했으

며, 박상천 의원 보좌관을 거쳐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싸게 팝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5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15~20만원에 매매 됨 (산64-21번지, 맹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